

문화예술계 여성 10명 중 6명 “성폭력 직접 경험”

연극·연예 52%... 전통예술·만화·영화 등 순
고용불안한 프리랜서·계약직이 피해자들
선배예술가·감독에 의한 성적 농담·추행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60% 가까이 성희롱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응답자 2478명 중 과반수 이상인 57.5%(1429명)가 이 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응답결과를 보면 연극분야가 52.4%(787명 중 412명)로 가장 높았다. 연예 분야가 52.0%(75명 중 39명), 전통예술 42.7%(192명 중 82명), 만화 및 웹툰 42.7%(186명 중 60명), 영화 42.4%(488명 중 207명), 미술 41.6%(707명 중 294명), 음악 33.2%(497명 중 165명), 문학 26.1%(387명 중 101명), 무용 25.3%(170명 중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불안할수록 피해를 입은 비율은 더 높았다. 프리랜서 응답자 2624명 중 1173명, 44.7%가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계약직 34.7%(380명 중 132명), 정규직 27.1%(280명 중 7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음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가 28.8%로 가장 많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는 27.1%였다.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34.7%나 됐다. 가슴·영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21.5%,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도 11.0%로 적지 않았다.

가해자는 대체로 선배예술가(64.9%)이거나 기획자 및 감독(52.5%)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의 87.6%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9.5%가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돼서’라는 응답도 59.5%나 됐다. 2차 피해가 걱정돼 문제제기를 꺼렸다는 의미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응답률이 64.7%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의 문화예술인이 프리랜서나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만큼 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57.2%를 차지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68.2%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 제한’이 60.4%로 그 다음이었다.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36.5%도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답했다. 가해자는 대학 선·후배나 동료(75.5%)이거나 교수(44.2%)였다.

한편 인권위와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조단을 운영해 왔다.

특조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

률 제정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뉴시스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의 날’ 제정 선포

문화재청이 오는 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제정해 선포한다.

문화재청은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와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문화재지킴이 날’을 제정하면서 전국 문화재지킴이와 일반시민 500여 명이 모여 문화재지킴이 취지와 성과,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한 문화재지킴이 역사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가는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새롭게 도약하도록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선포식에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표창, ‘문화재지킴이 날’ 선포 행사, 실록 이안(移安) 재현 행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2005년 4월부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시작됐다.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 가족, 학교, 비정부기구 등 전국 자원봉사자 8만 4000여 명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 및 일상 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 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 및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 3500여 개가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지킴이 날 제정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594년 4월 임진왜란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4곳 중 3곳이 소실되고 전주사고만 남아 ‘조선왕조실록’이 멸실할 위기에 처했다. 그 해 6월22일 정읍의 선비 안의와 손홍룡 등이 실록을 전란의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이를 내장산 용굴암로 옮겨 1년 넘게 지켰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져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전 세계인의 문화재가 됐다.

/뉴시스

전주박물관·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실�크로드 학술조사 협약

국립전주박물관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해양 실�크로드 학술교류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 실�크로드 학술조사·연구의 활성화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해양 문화 연구 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첫 번째 사업으로 부안군에 속한 위도의 해양 문화유산조사와 해양 제사 유적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증발굴, 전시,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박물관은 1900년대 부안 죽막

동 제사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해양 제사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동안 제사와 관련된 전시, 학술행사를 실시하고, ‘제사유적 유물 자료집’ 시리즈 간행 등 제사 관련 학술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도서 지역 해양 제사 유적 학술조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양문화재연구소 역시 해양 실�크로드 항로상의 거점 섬과 해양문화 및 교류에 대한 조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전북도 수증발굴 15년 성과를 정리한 특별전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을 소개한 바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